정부, 단일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국힘 "국조·특검을" 질타

"'빚내서 투자하라' 던 李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침묵

주식시장 난장판… 김용범·이억원·이찬진 경질을"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일시 매매거래 중지)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급락 사태에 정부가 개인별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 방침으로 대응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면서 'F4'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증시가 흡짝 도박판이 됐다"며 "단순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할 범죄행위"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빚내서 투자하라고 (독려)했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남의 일처럼 침묵만 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용범)정책실장도 (출장지인)브라질에서 '개인투자자들 역동성 때문'이라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국민 염장을 지르는 말만 하고 있다"며 "여기에 한 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비상사태에서나 나올 법한 서킷 브레이커가 일상이 됐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도 주가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했고 개미투자자들의 계좌는 파란색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고 규정한 안 의원은 "상장폐지, 거래정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당국자들은 '보완책 검토 중'이라는 언설로 한달 이상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휴먼 에러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을 더 이상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이 세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코스피는 한달 사이에 30% 폭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때보다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을 이 같은 난장판으로 만든 데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유동시장이나 구조적인 특성이 변동성을 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던 김용범 실장을 겨냥해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의 옹색한 변명과 궤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앞서 국내 증시 폭락 장이 이어지자 전날 오후 6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 수석이 참석한 긴급시장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1차 보완책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초 8월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 이후 시행 시기가 앞 당겨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31일부터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탁금 산정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되고 현금만 인정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일반 투자자 신규 매수 제한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규제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품 배율을 현행 2배보다 낮추는 방안에 대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국민의힘, '선관위 특검법' 합의… 선거전산시스템도 수사

국조특위 활동 30일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뿐 아니라 투표를 집계 조작 의혹 및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오류, 선관위 운영 비리 등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통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관련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양당 간사가 구체적으로 조문작업을 진행하는데, 세부 쟁점은 빼놓고 신속히 법안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국조특위 활동을)30일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수사 대상을 놓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를 했다"며 "주요 쟁점에 합의해서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검표와 관련해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 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투표용을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등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 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을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 수사대상이다.

특검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 기한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관위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 중 여야가 합의해 2명을 올리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김영진 "헌법 개정에 장애물"… 趙의장 '연임 개헌' 사과 촉구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조 의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의장)본인의 실수와 실언, 그에 따르는 사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의장은 상당히 신중한 의원 중 한 분이다. 당 사무총장도 했고 주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분이라서 저도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다"라며 "명확하게 본인이 실수, 실언이었다, 일반론적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대통령 연임과 결부돼 나가면서 확대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이 중임이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 개정인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의장의 SNS 글로)힘게 마무리될 것 같진 않다. 이건 대단히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며 "실제로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주요한 사안들을 여야 합의하는 수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진행하고 어려운 문제에 관해 추후 논의해가면서 여야가 합의해 헌법 개정의 장을 열자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서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공격들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 공격에 대해 조정식 의장이 현재 의장으로서의 위치에서 대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2022년, 2025년 대선 시기에 연임 개헌 문제에 관해 헌법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한데 '나의 마음을 몰물어보냐, 정확하다'는 언급을 분명히 했다"며 "또 대통령의 의지와 뜻, 메시지를 전하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본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나 지금이나 그 원칙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넘어서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김민석, 제2 박찬대 될수도… 정청래 '감성적 접근' 성공"

박지원 "檢개혁 불러온 것은 尹·한동훈 책임" 직격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김민석 후보는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찬대 (당 대표) 후보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이 지원했었는데 결과는 정청래가 됐다. 정청래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가)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당대회가) 진흙탕이 됐는데 이건 패착"이라며 "다행히 충청도 투표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충북지사, 세종시장 만나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정책 협의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걸 일찍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는 8월1일 충청권 경선과 관련해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처음 분석할 때도 정청래 절대 무시 못한다, 호남에서는 송영길이 꿈틀거린다고 했었는데 그대로 딱 나오지 않았나. 정청래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이러한 검찰 개혁을 불러온 것은 역사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한동훈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 하는데 이건 참새가 죽을 때 짹하고 죽듯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또 검찰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한 말씀해 본 거지,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그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성호 장관은 어떻게봐든 검찰 수장이고 법조인으로서 자기의 조직이 없어지는 데 대해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자기 손으로 해체하는 것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 아니었겠나"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러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완전히 끝마치고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을 제대로 출범시키고 그 방향이 잡히는 한두달까지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마치는 법무부 장관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힘, 일하는 국회·檢개혁 가로막지 말라"

민주 "무책임한 정쟁" 지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할 자리에서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는 불참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 데 이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면서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이어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놓고 이제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고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부실수사가 우려되는 경우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다"며 "압수수색, 검증의 전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해 수사의 투명성에 핵심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다.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라며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입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李대통령, 칠레 산티아고 도착

"깊은 우정 마음은 늘 가까이"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칠레로 이동한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는 지도상으로는 대한민국과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은 늘 가까이 이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줬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경제의 문을 넓히기 시작했을 때 칠레가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가 돼 줬다"고 말했다.

실제 1998년 한국 정부는 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고 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다.

이후 1999년 협상이 개시됐고 2004년 한국 첫 FTA가 발효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은 대지진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더 큰 피해를 본 칠레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복구에 힘을 보탰다"라며 "오랜 세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온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한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동포 정책과 영사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겪는 불편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 어디에 계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외국에서도 고국의 따뜻한 배려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하상욱 칠레한인회장은 "처음 칠레에 왔을 때 우리를 보고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화답했다.

한편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30일에는 칠레의 건국 영웅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동상에 헌화한 뒤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도 예정돼 있다.

이후 양국 기업인이 만나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하고, 칠레에서의 1박2일간의 공식방문 일정을 마친 뒤 아르헨티나로 이동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